

“마스크는 타인 배려하는 것”…대중교통 내 실랑이 ‘엄벌’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구속영장 발부 “엄정 대응”

전문가들 “백신 전 코로나19 예방법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의 주요 목적은 ‘내가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 아니라 ‘남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덕한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의 말이다. 이 조언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던 승객이 ‘실랑이’ 끝에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결국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서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50

대 승객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게 빌미였다. 이를 문제 삼은 승객과 A씨는 시비가 불었다. A씨는 두 사람 간 다툼을 막리던 승객의 뺨을 때리고 급기야 침을 뱉고 도주했다.

A씨는 따라오던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뜯는 꼼꼼한 상황도 연출했다. 버스기사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상해 혐의를 그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한 뒤 지난 20일 저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실랑이’가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지난 18일 충무로 지하철역에서도 남성 2명이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툼이 커져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29일 부산에서는 30대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이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60대 남성은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4개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구속된 A씨의 경우 실형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대중교통 탑승 과정에서 ‘시비 소란’ 사례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하면 운행방해와 시비 소란 관련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주기적 유행)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방역 관련 대응 수준을 높인 것으로 분

석된다. 한때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22일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국내 총확진자 수는 1만2373명이다.

전문가들도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은 마스크라고 입을 모운다.

뉴스1



부분일식 관측하는 시민들 부분일식(금환일식)이 시작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부분일식을 관측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53분부터 2시간 11분 가량 부분일식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일식현상은 해가 가려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부분일식, 개기일식, 금환일식으로 구분한다. 부분일식은 해의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개기일식은 해의 전부가 가려지는 경우를 말한다. 금환일식은 달의 공전 궤도상 지구와의 거리에 의해 해의 전부가 가려지지 않고 테두리가 남아 금반지처럼 보이는 경우를 가리킨다.

칼로 견주 협박한 50대 신고했다고 보복…집유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질 좋지 않아”

이웃을 찾아가 칼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13시간 만에 보복한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와 이웃은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이웃집 앞에 화분 5개를 연달아 집어 던지며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바로 전날 A씨는 B씨를 찾아가 칼로 위협했는데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일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13시간 만에 벌

생했다”며 보복협박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둘은 B씨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애완견을 성대결절 수술을 시켰다는 말을 듣고 개에게 너무 전인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분노를 느껴 B씨를 위협하고 회문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킨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속도제한장치 해체·보폭 운전도 2개월간 집중 단속

경찰청은 2개월간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를 비롯한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각 지역별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

로 해체하는 업자와 운전 뿐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한 사람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자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또 원상복구 여부 확인 뒤 불이행 차량 운행자를 형사 입건해 교통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

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도 비노출차량을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영상 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난폭·보복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상습 운전자를 상대로 구속 수사·차량 압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은 그동안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